27조 삭감 vs 총량 유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험로 예고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입장차
국힘, 현금 살포 예산 등 감액 시도
민주, 예산 총량 지키며 사업 조정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증·감액을 심사해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곤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주요 사업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안보다 12.8%했고, 이중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한 초과세수를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2027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 전액 국채상환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정부에 복구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 대대적 삭감 등을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 편성 예산안의 전면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미래대응기금(162조3000억원), 협동조합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1조8210억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3억원) 등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유상범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7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감액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해소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요 증액 사업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소방 안전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은 있을 수 있어도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규모 총량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예결위 여당 간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미래대응기금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것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이자 투자이고 국가 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재정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재정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급·간식비가 차별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과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도 고민 중이다. 5차 철도 계획이 확정될 것인데,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개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 적극 협상하고 있고 확충해서 지방주도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회복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투자 관련 해킹 방지와 소방 관련 예산은 예산 정국 때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에 열고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체제' 흔드는 친청계… 與 갈등 격화

친청계,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 높여
친명·친석계, 최민희 최고위원 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성윤(왼쪽부터), 한민수,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당 리더십을 두고 본격적인 계파 간 투쟁의 서막이 오를 전망이다.

김민석 지도부의 5명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친청계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인데, 이들은 김 대표의 '반·분·신(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제3자 비밀연합' 주장을 공개 최고위원회 등에서 비판해왔다.

친청계는 반분신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의원총회에게 사과한 김 대표와, 이후 이뤄진 비공개 방식의 '당원 정비 TF' 신천지 교인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 열람 방식을 두고도 반발하며 동력을 모았다.

이들은 김 대표의 취임이 열흘 정도 남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윤리감찰 대상은 김 대표"라며 직격했다.

친청계의 기자회견 전날(12일)엔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역구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으며 청와대도 최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친청계의 공세는 거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정청래 전 대표가 신천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밀연합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인가란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원 정비 TF 조사) 보고서의 한 항목이 아예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었다"고도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 상관 없이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아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두고 "그동안 민주당은 어떤 사안에서든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며 "반·분·신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 공약, 주장,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압박하고 있는 친청계는 이번주 최고위원회의, 다음주 김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입장을 내고 당권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 체제 100일 이후)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내 일부 친명(친이재명)·친석(친김민석)계도 친청계를 대상으로 '최민희 최고위원 제명'이라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치며 당내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친명 지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경기도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최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당 내 중진이자 원로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 당 내 분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정 전 대표와 만날 의사를 보이자, 정 전 대표는 "'사과의 3원칙'이 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라.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말하라"며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하시라"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李 아시아 순방길… 미중 외교 '시험대'

오늘부터 아세안·APEC 회의 참석
트럼프·시진핑 접촉 여부 주목
美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시아 지역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을 모두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8~19일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미중 정상과의 접촉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과 APEC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한다. 양자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자외교 무대에서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나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순방의 관건은 미중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는 실용외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역과 안보를 넘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정보기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만큼 미국의 규제 변화가 반도체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 경제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 한반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구상을 설명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선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미중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반도 안보 문제가 거론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미중러 회담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중과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